

제주살이 열풍에 자연녹지 난개발 심화

순이동자 2011년 2343명 → 2017년 1만4005명
주택준공 2011년 758호 → 2017년 5939호로 ↑
도심 수평개발 원인 제공... 자연훼손도 초래

지난 2014년 민선 6기 제주도정이 들어선 후 불어닥친 이주 열풍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붐 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도시의 수평적인 팽창을 유발했으며,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일 제주도 자연녹지지역 내 연도별 주택 건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준공건수는 758호였으나 2013년 2392호, 2014년 1652호, 2015년 2497호,

2016년 4283호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2017년 5939호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3930호)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 2158호에서 2020년 1643호, 2021년 11월 현재 1041호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처럼 2015년부터 자연녹지 내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2014년부터 불기 시작한 제주살이 열풍으로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순이동자수는 2011년

2343명였으나 2012년 4876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고, 2013년엔 7823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4년엔 1만1112명을 기록했고 이후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으로 4년 연속 1만명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제주경제 침체기의 신호탄이 됐다. 제주경제의 고성장이던 2011년~2017년까지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율은 6.4%였으나 지난 2018년엔 마이너스 성장률(-0.9%)을 보였다. 이중 건설업은 생산과 투자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들어가 총고정투자(건설투자+설비투자+지식생산물투자)는 2020년 전국 17개 광

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급증하자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나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행위는 차단하지 못했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주 이주 열풍으로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자연이 훼손됐다"며 "이는 결국 도시개발을 수평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2018년부터 제주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건축경기도 나빠졌다"고 전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재정자립도 높이고 해저철도 건설” 장정애씨,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장정애 제주주권연구소 이사장이 20일 “갈등과 상처로 양분된 제주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자연과 공동체는 젠더, 이주민·원주민, 제2공항 갈등 등으로 양분돼 극한 상황에 도달했다”며 “제주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장 이사장은 “제주 자연 회복을 위해선 재원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재원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 살림 운영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또 “떡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안은 제주와 본토 간 해저 철도 건설”이라며 “그간 환경단체와 도민 반대 여론에 직면해 왔으나 해저철도 건설은 제2공항의 대안으로써 가장 발전적인 대안이다. 제주가 세계의 관광수도가 될 것이며 결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신문교체를 개설해 도지사와 도민이 직접 소통하고, 도내 쓰레기매립장을 완전히 걷어내 인공섬에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대기자

“내년도 국비 확보 1조8000억 목표”

도, 어제 국비·뉴딜사업 회의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총력
중앙부처와 협의도 지속 진행”



제주자치도는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점검 회의'를 열고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등을 중점 논의했다. 사진=제주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국비 확보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잡고 신규사업과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목표액 1조6709억원 대비 1291억원(7.7%)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196건·2419억원 규모의 신규 국비사업과 제주형 뉴딜사업에 대해 논의됐다. 신규 국비사업은 ▷제주 스마트 충전기 운영기반 구축사업(22억원, 그린뉴딜)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50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72억원, 그린뉴딜) ▷바다목장 리뉴얼 해조숲 조성(16억원, 그린뉴

딜) ▷교래정수장(광역) 신설(1단계) 사업(56억원) 등이다. 뉴딜사업은 가상현실 제주소포 초센터 조성(50억원, 디지털뉴딜)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사업(45억원, 그린뉴딜) ▷제주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77억원, 디지털뉴딜)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19억원, 디지털뉴딜)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

립사업(50억원, 휴먼뉴딜) 등이 추진된다. 구만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중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제주도의 새롭고 우수한 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대기자

지방선거 예비출마자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평가를 위해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격성 평가는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과 현안 분석 능력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당헌·당규, 정치관계법, 시사현안 등이며 문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된다. 국민의힘은 평가시기와 방법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과정에서의 검증은 많은 후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기 어렵고 국민이 후보들의 면면을 다 알고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4·3희생자 추념일 달력에 표기” 이원욱 정보통신위원장, 천문법 개정안 발의

제주4·3희생자 추념일 공휴일을 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서의력에 기존 관광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표기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출신)은 20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령요항(月曆要項)'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광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당국에 고함

주택가 도로변의 주상복합건물은 결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이 골목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있다. 열악하기만 한 이런 환경에서 세입자가 건물 외벽에 밀착해서 창고를 짓겠다고 하면, 건물주는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별 불일 없는 골목 상가에서는 세입자가 “갑”, 건물주가 “을”이지, 건물주는 절대로 “갑”이 될 수 없다. 창고 설치 비용도 세입자 쪽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게다가 자기네들끼리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소유 또한 건물주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즉 지주 따로, 창고주 따로인 셈이다. 영업 부진에 허덕이던 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창궐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세입자에게, 토지 소유자라고 원상 복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못 할 짓이다.

소방 당국이나 시 당국은 이런 실상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주들을 뒤달라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주택들 중에서도 정도 이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택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너무 편파적이라 말이다. 주상복합건물이 건물 외벽에 만들어진 창고나 다용도실 등이 문제라면서 주택들은 외벽이나 칸막이 등, 운동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화재에 취약해서 더 문제인 것이다. 동시에 화재가 발생, 전소되었을 경우, 뼈대 이상이 남는 콘크리트 주상복합건물과 달리, 경량철골구조주택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며 순식간에 잔해만 남지 않겠는가. 소방 당국도 이 차이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리고 시 당국도 이런 부실한 주택을 건축허가해 주는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미미한 약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미미한 것들을 무단중축한 위반건축물이라고 뽕튀기로 과대포장하였는데, 시 당국의 눈에는 도시 번두리에, 혹은 농촌 지역에 차고 넘치는 네모형의 반듯한 무허가 건물들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주상복합건물이 대체로 덩치가 커서, 도시를 도시답게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이 무허가 건물들이야말로 화재 위험도가 매우 높은 뿐 아니라,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기도 하다. 이런 초소형주택을 제작, 야외에 상시 전시하며 고객행위를 하는 업소 또한 성업 중이다.

주상복합건물주들도 일반주택 소유자들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해마다 거액의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오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1등 시민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번엔 자존감이 상할대로 상하였다. 이러한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협조와 호응을 얻었다면, 가가호호 도로명주소 부여해 줄 때처럼, 한집도 건너 뛰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단속하라는 것이다. 상식과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적어도 제주시민들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겠는가. 역세게 운이 좋아서 이번 단속과 제재에서 제외된 일반주택 소유자들의 무허가중축건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심경이 착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는 시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설득력이 있겠는가.

2022년 1월 21일